

# 尹, 브라질 G20 일정 돌입... 글로벌 빈곤퇴치 방안 등 제시

개발도상국-선진국 가교역할 강조  
'러-북'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 제기  
남아공·멕시코·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아오 공군기지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위기, 식량부족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2분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아오 공군기지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도착 행사에 브라질 측에서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 지역대사, 파비우 실바 공군기지 단장,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

석해,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은 기간 기후변화, 무역, 개발, 디지털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여 방안을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20 참석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중간 중간 북수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장국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아프리카·남미의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지평과 실질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부실 발생시 공적자금 사용 안해... 자기책임원칙 강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간담회  
내년 예금보험 3.0시대 준비 박차  
“예보한도 1억 대비 금융계정 필수”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앞으로는 금융사 부실발생시 공적자금과 타업권의 금융계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해당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내년부터 예금보험 3.0

시대를 위해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1996년 제도를 마련한 이후 외환위기로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자 공적자금을 투입,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전 업권 금융계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했다. 서서히 공적자금과 특별계정의 상환이 종료되는 만큼 예보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타업권이 적립해 놓은 기금과 보험료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예보제도(자기책임원칙·상호부조원칙)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최후 수단이어야 할 방안을 쓰는

것을 끝내고, 예보제도 중 ‘자기책임원칙과 상호부조원칙’에 따라 업권이 납입한 보험료 등으로 구조조정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때보다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안을 보면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기존 예금보호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유동성 경

색을 겪을 조짐이 보이면 예금보호기금의 자금 일부를 금융안정계정으로 차입하고, 이 돈을 금융사의 채무 지급보증, 대출, 출자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각 금융사가 납입한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금융안정계정으로 보낸다.

특히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더 필요하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을 겪게 되면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안정계정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유리기자 yul115@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